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52
----------	------

발의연월일 : 2024. 11. 11.

발 의 자 : 조은희 · 신성범 · 이성권
이인선 · 우재준 · 박정하
주진우 · 김용태 · 윤상현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청년은 약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를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위기청소년 전담기관의 장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

센터에 연계하여야 함(안 제2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취약계층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의 개발·운영 방안
3.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전달체계 구축
4.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7.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9.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0.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활동, 주거,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제20조에 따른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취약계층 청년으로서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 주거 여건,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실태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원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 청년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제공기관 연계)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지원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제공기

관과의 연계는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방법, 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 및 상담을

포함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 관련 상담 및 교육,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행사 개최, 국·공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이하 “맞춤형 통합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에 따른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홍보
2.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3.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4.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5.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신청 및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청년 상담 및 정보제공
2. 취약계층 청년과 지원제공기관 간 연계
3. 취약계층 청년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협력
6.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신청 및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원센터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장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의 안내 및 지원센터에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중

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 유지의 의무)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약계층 청년의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아니면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또는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아니면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